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임 소 진 (KOICA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원조효과성 논의
3.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4. 파리선언과 원조효과성
5. 부산파트너십과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
6.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 및 연구과제

1. 서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원조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큰 규모의 원조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수원국들이 극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예 : Sachs, 2005), 또 다른 학자들은 원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예 : Calderisi, 2006; Easterly, 2006; Moyo, 2009), 일부 연구에 의하면 원조는 올바른 정책적 환경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예 : Burnside and Dollar, 1997; World Bank, 1998).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조사업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항상 실패하는 것도 아니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가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흑백논리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나아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조 외 재원을 포함한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선 원조효과성에 대한 주요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동향 및 개발효과성 그리고 개발협력효과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원조효과성 논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주장의 대부분은 원조가 빈곤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운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그 예로 원조가 빈곤을 퇴치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즉, 공여국이 오랜 기간 많은 양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촉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Calderisi, 2006; Easterly, 2006; Moyo, 2009). 이는 원조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발, 특히 재물의 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원조의 효과(effect)’를 통해 원조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Doucouliagos and Paldam, 2006: 227).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원조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 : McGillivray, 2004; Dovern and Nunnenkamp, 2007). 반면 일부 학자들은 원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상관관계의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Raffer and Singer, 1996; Sogge, 2002; Easterly, 2006).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단지 원조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원국 내 분쟁 및 수원국 정부의 부패와 같은 요소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원조의 효과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효과성 평가를 위해 ‘원조는 효과적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과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후 DAC)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원조효과성은 ‘성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OECD, 2006). 다시 말해서, 원조효과성이란 원조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아닌 원조의 방법, 과정, 성과 사이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의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인 파리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원조전달 메커니즘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원조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조 과정에 있어서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수원국과 공여국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수원국의 경우, 원조를 받는 과정의 원조재원 관리에 있어서 1) 시스템적 역량과 정부의 인적 역량 (Cassen, 1994; Burnell, 1997; Lancaster, 2007), 2) 바람직한 경제정책 (Burnside and Dollar, 1997; Collier and Dollar, 2002), 3) 수원국 정부의 부패정도 (Hanlon, 2004; Sachs, 2005; Collier, 2006)가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공여국의 협력과 조율에 의한 수원국 역량강화와 주인 의식 강화 노력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 : Riddell, 2007). 수원국들은 공여국의 상이한 원조절차와 조율되지 않은 관행, 그리고 수원국의 국가역량을 넘어선 원조시스템 요구 등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Amis, Green and Hubbard, 2005). 이는 실제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원조일치, 수원국 현장에서 공여국간의 원조조화라는 파리선언 원칙의 배경이 되었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관련하여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공여국 중심의 원조를 벗어나 수원국의 맥락에 맞는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고려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Amis and Green, 2002; Schiff and Winters, 2003).

공여국의 입장에서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크게 1) 공여국의 협력 및 조율 부족, 그리고 2) 공여국 중심의 원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공여국 간의 협력과 조율 부족이 원조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 : Tarp, 2000; Banerjee, 2007; Riddell, 2007). 이는 다양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및 원조동기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원조사업의 확산과 중복으로 인한 수원국의 업무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Cassen, 1994; Banerjee, 2007; Lancaster, 2007; Riddell, 2007). 반대로,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협력과 조율 강화를 통해 행정비용의 감소와 중복되는 원조사업의 감소가 가능하고, 이는 수원국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Banerjee, 2007; Riddell, 2007). 또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협력 및 조율에 의거한 수원국의 역량강화 역시 원조재원 흐름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Degnbol-Martinussen and Engberg-Pedersen, 2003; Ranis, 2006). 이는 특히 파리선언에서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다. 파리선언 이후의 원조조화 원칙 이행을 위한 수원국 내 공여국간의 노동분업(division of labor)은 공여국의 협력과 조율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수원국 주인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여국 중심의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Martin, 2008). 특히 공여국 중심의 원조제공에 대한 비판은 1980년대 시작된 수원국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과 원조에 대한 조건 제시 정책(conditionality), 그리고 1990년대의 공여국의 수원국 선택정책(selectivity)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 외채위기에 처한 수원국들에게 IMF 및 세계은행이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수원국들의 광범위한 경제구조 전환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곧 선진공여국들의 원조정책에도 반영되어 원조 제공시 경제정책 구조조정이라는 조건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하시키고 (Cassen, 1994; Killick, 2002; Morrissey, 2004; Sobhan, 2002), 나아가 공여국들이 제시한 이른바 정형화된 정책조건이 각기 다른 수원국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원조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받고 있다 (Chang, 2002; Killick, 2002; Morrissey, 2004; Lancaster, 2007). 즉, 하나의 단일한 기준이 모든 수원국에 적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One size does not fit all). 특히 그 예로 워싱턴 컨센서스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한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Chang, 2002).

원조에 대한 조건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정책이 수원국의 경제구조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해하였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원조는 올바른 정책환경, 즉 굳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갖추어진 수원국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세계은행의 ‘원조평가(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를 통해 밝혀졌다 (World Bank, 1998).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은 굳거버넌스를 갖춘 수원국을 선택(selectivity)하여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Easterly, 2003; Bourguignon and Sundberg, 2007; Lancaster, 2007). 그러나 굳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지 않은 수원국에서도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Lensink and Morrissey, 1999; Chauvet and Guillaumont, 2004), 굳거버넌스 중심의 수원국 선택은 결국 굳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는 여건 또는 역량이 안 되는 수원국에 대한 ‘체벌’로 작용하게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Tarp, 2000). 나아가 굳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수원국 선택의 배경이 된 연구결과 자체가 데이터 통제 및 분석에서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Hansen and Tarp, 2001; Easterly, Levine and Roodman, 2003).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공여국의 원조제공시 수원국을 선택하는 정책(selectivity)은 공여국의 원조에 대한 조건제시 정책(conditionality)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하시키고 수원국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여국 중심의 원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1990년대 후반에는 공여국의 협력 및 조율 문제와 수원국 환경에 대한 고려부족, 그리고 공여국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메커니즘 및 조건제시 정책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공여국의 협력 및 조율 강화와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키려는 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공여국들은 수원국을 더 이상 원조제공의 대상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조정책 및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공여국 행동에 의한 부정적 결과는 원조 전달과정과 원조양식에 있어서 새로운 원칙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말에 시작되어 2005년 파리선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할 수 있다.

3.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원조효과성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1990년대 후반은 시기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96년 OECD DAC에서 발표한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과 1999년 세계은행이 소개한 ‘포괄적 개발의 틀(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이후 CDF)’은 2000년 이후 원조효과성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은 1995년 OECD 회의에서 이루어진 정책성명서를 확장한 것으로써, 개발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측면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제공하여 원조효과성 고취를 위한 공여국간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1세기 개발협력전략에서 소개한 7가지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는 1998년 버밍햄 정상회담(Birmingham Summit)에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위한 목표로 채택되었고, 2001년 수립된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의 근간이 되었다(OECD, 1996; Therien and Lloyd, 2000). OECD의 21세기 전략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공하였고, 또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최초의 글로벌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Therien and Lloyd, 2000).

세계은행의 ‘포괄적 개발의 틀’은 경제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 전략으로써, CDF의 이행방안(action plan)으로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 및 빈곤감소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이후 PRSP)가 개발되었다 (Wolfensohn and Fischer, 2000; Stern, 2008). PRSP는 2000년 이후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있어서 원조효과성 향상과 빈곤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Driscoll and Evans, 2005). 또한 PRSP는 특히 파리선언 이후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과 관련한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에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1990년대 생겨난 젠더,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종합하여 2000년 UN에서 회원국들은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01년 MDGs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8개의 글로벌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빈곤퇴치와 경제 및 사회개발을 이루고자 하였다. MDGs는 개발 아젠다에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발전 그리고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개념을 포함하였으며, 원조체계에 결과중심의 메커니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Maxwell, 2003; Hulme, 2007). 그러나 MDGs 목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많으며, MDGs 이행 성과가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Maxwell, 2003; Chakravarty and Majumder, 2008). 또한, 2015년 MDGs 달성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의 실패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원조효과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1990년대에 겪었던 ‘원조피로(donor fatigue)’와 같은 상황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kiyama and Kondo, 2003). 따라서 2001년 MDGs 개발 이후로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선, 2002년에 열린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은 2001년 개발된 MDGs를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MDGs 달성을 위한 원조의 양적증대를 약속하였다. 특히 다자기구와 공여국 정상들은 국내재원 동원, 국제재원 동원, 국제무역, 국제개발협력, 외채탕감, 국제체제 문제의 6가지 개발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몬테레이 합의문(Monterrey Consensus)에 동의하였다. 몬테레이에서는 원조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OECD, 2003).

몬테레이 회의 이후 OECD DAC은 작업반을 형성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 절차 강화방안’과 ‘원조효과성 제고와 행정비용 감소 방안’을 위한 공여국의 모범사례를 도출

하도록 하였다(OECD, 2003). 이 작업을 바탕으로 2003년 이태리 로마에서 원조조화를 위한 제1차 고위급회담이 열렸으며, 25개 양자공여국, 23개 다자기관, 그리고 28개 수원국이 모여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효과성 향상,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World Bank, 2003). 로마회의에서는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이 채택되어 원조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 행정비용 감소, 수원국 정부의 역량 및 재원 확대에 대해 합의하였다 (Gerster and Harding, 2004). 로마회의 이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공여국의 협력 및 조율 문제가 원조조화 및 일치와 관련하여 로마선언의 중심 아젠다가 되었다 (Menocal and Mulley, 2006). 또한 이를 중심으로 제시된 ‘원조효과성 개념 프레임워크’ (그림1 참고)는 이후 파리선언 5대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림 1〉 로마선언에서 개발된 원조효과성 개념 프레임워크



출처 : Balogun, 2005

제1차 고위급회담 이후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세계은행, 그리고 OECD는 2004년 모로코 마라케(Marrakech)에서 합동 마라케 각서(Joint Marrakech Memorandum)를 통해 개발결과관리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촉구에 합의하였다 (ADB, 2004). 마라케각서는 제2차 개발결과관리 국제라운드테이블(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 MfDR)에서 합의되었으며,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이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원조조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와 MDGs 달성, 그리고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2005년 제2차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을 통해서 더욱 활력을 띠게 되었다. 파리선언은 원조와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의 장시간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 파리선언과 원조효과성

2005년 MDGs의 5년간 이행현황 평가 및 원조관리 체계의 변화 논의를 위해 100명 이상의 각국 정상들과 다자기구 수장들이 파리에 모여 제2차 고위급회담을 갖게 되었다. 파리회의의 결과인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MDGs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효과적 원조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서로 다른 국가상황에 파리선언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원조의 질적 향상과 인간개발에 더 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OECD, 2008; Stern, 2008). 파리회담 참여자들은 공여국 원조의 분절화와 중복, 불필요한 행정비용, 원조성과에 대한 책무성 부족, 수원국의 주인의식 부족과 같은 비판들을 고려하여 공여국, 다자기구, 그리고 수원국 모두 조화, 일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의하였다(De Renzio, 2006). 파리선언을 계기로 원조효과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원조규모와 성장의 관계가 아닌 원조과정과 원조사업 절차의 효과성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전의 원조효과성은 원조활동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면, 파리선언을 계기로 원조과정 메커니즘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즉, 파리선언 이후의 원조효과성이란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원조성과의 최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임소진, 2012: 12).

OECD DAC은 파리선언이 원조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OECD, 2006). 첫째, 파리선언은 로마회의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더 높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실질적이고 행동중심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파리선언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변화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리선언은 도너십(donorship)에서 오너십(ownership)으로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상호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파리선언은 표1과 같이 5대원칙과 12개 세부지표를 제시하여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파리선언 채택 당시 제시된 세부지표는 2a, 2b, 5a, 5b, 10a, 10b를 각각 2, 5, 10으로 통합하여 계산하여 총 12개 지표로 정리하였으나, 2010년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최종 평가 당

시 애초에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던 2b와 2b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a, 5a, 10a, 10b를 각각의 독립적 지표로 계산하여 총 13개의 지표로 재구성 하였다.

파리선언 이후,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바탕으로 2008년 가나 아크라(Accra)에서 제3차 고위급회담이 열려 1,700명의 원조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아크라회의에서는 개발협력 활동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신흥공여국 중심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효과성, 그리고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Accra High Level Forum, 2008b).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은 아크라회담 이후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함으로써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대화, 수원국 역량강화, 수원국 시스템 이용 촉진, 원조분절화 감소, 원조의 가치(value for money) 증가,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ccra High Level Forum, 2008a). 이러한 국제사회의 MDGs 달성과 파리선언 이행 노력에 대한 2010년 최종평가의 결과는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부산총회)에서 논의되었다.

〈표 1〉 파리선언 5대원칙 및 세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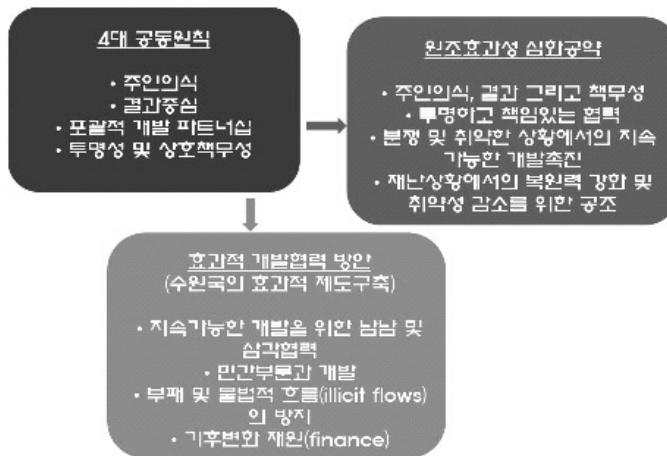
| 5대 원칙 | 13개 지표 |
|--------|---------------------------------------|
| 주인의식 | 1. 수원국의 실질적 개발전략 소유 |
| 원조일치 | 2a.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
| | 2b.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
| | 3. (수원국) 국가우위와 일치된 원조의 흐름 |
| | 4. 조율된(coordinated) 지원을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 |
| |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활용 |
| |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
| | 6. 평행적수행조직중복회피를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 |
| | 7. 원조예측성 제고 |
| 원조조화 | 8. 원조의 비구속화 |
| | 9. (원조사업의) 공동 업무처리 또는 절차사용 |
| | 10a. 공동 현지사무소 |
| | 10b. 공동 국가 분석 활동 |
| 결과중심원조 | 11. 결과중심의 프레임워크 |
| 상호책임성 | 12. 상호책임성 |

출처 : 임소진, 2012: 16-17

5. 부산파트너십과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

2010년까지로 예정된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MDGs 달성을 위한 원조의 질적 프레임워크 점검을 위한 마지막 고위급회담이 2011년 한국 부산에서 열렸다(OECD, 2010). 부산총회는 3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의로 기록되었다.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은 2011년 부산총회를 통해 부산결과문서를 채택함으로써 4대 공동원칙,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강령 심화공약과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 그리고 Post-Busan 이행체제에 대해 합의하고, 2012년 6월까지 부산파트너십 이행 지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OECD, 2011).¹⁾ 또한, 부산총회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주요 주체들은 Post-Busan 체제를 OECD와 UN의 공동체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2〉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 및 주요공약



출처 : 임소진, 2012: 28

부산총회를 통해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한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뚜렷한 정의와 논의 미흡으로 인하여 ‘개발협력효과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총회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효과성’과 ‘개발협력효과성’이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저자는 기 연구에서 개발효과성을 ‘수원국 국민을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개발활동 성과의 최대화’라고 정의하고, 효과적 개발협

1) 부산결과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개발정책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을 참고 바람.

력이란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가 행하는 수원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관련 개발협력 활동성과의 최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임소진, 2012: 12-15).

원조효과성이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개발효과성은 ‘개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개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의 효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이라는 의미에서 ‘개발효과성’ 보다는 ‘개발협력효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결국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 그리고 개발협력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란 개념적 차원에서 원조를 넘어선 원조 외 재원과 민간기업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이 개발협력 활동의 주요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조의 과정 중심을 탈피하여 개발협력 활동의 수혜자 중심의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부산파트너십의 이행 지표는 파리선언 이행평가에서 발견된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 제고와 MDGs 달성을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행동변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여국과 수원국의 다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파리선언 이행결과 평가에서는 13개 세부지표 중 지표4 조율된 기술지원을 위한 역량강화만이 달성된 미완의 결과를 낳았다 (OECD, 2011). 공여국과 수원국들이 파리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2005년에서 20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현실적이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함께, 유럽 중심의 선진공여국의 원조양식을 주로 이행하도록 하였고, 수원국에게 그들의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수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임소진, 2012). 또한 파리선언의 13개 지표가 너무 기술적이었으며 이행을 위한 해석이 국가별로 다양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현저히 미흡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을 위한 Post-Busan 임시그룹(Post-Busan Interim Group, 이후 PBIG)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위와 같은 파리선언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부산지표 개발을 위한 PBIG 제1차 회의는 2012년 2월 13-14일, 파리 OECD에서 열렸다. 제1차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3월 중순,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부산 예상지표 제안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협의문서가 제2차 회의 논의를 위해 3월말 참여국에게 회람되었다. 제2차 PBIG 회의는 2012년 4월 4-5일에 열렸으며, 주로 글로벌 지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PBIG 회의 이후 영국과 르완다가 주도하여 부산파트너십 제안 지표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2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은 13개의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지표는 제3차 회의 일주일 전인 2012년 5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화상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내용과 이후 이메일을 통한 추가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PBIG 회의의 마지막인 제3차 PBIG 회의가 2012년 5월 21-22일 양일간 열렸다. 이후 참여국들의 온라인 및 화상회의를 통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제안된 지표의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2012년 6월 28-29일에 열리는 OECD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부산파트너십 지표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갖게 된다.

제1차 PBIG 회의 이후 참여국들은 부산지표는 파리선언의 13개 지표보다 적은 수의 지표로 한정하고, 기술적인 면을 최소화하며, 수원국의 역량 및 시스템 강화, 신흥공여국과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 등의 새로운 파트너들의 참여 확대, 세부적인 국가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차원 모니터링의 융통성 고려, 기존의 정보와 분석법 최대한 활용, 정성적(qualitative) 모니터링 방법과 정량적(quantitative) 모니터링 방법 모두 이용, 그리고 지식교환 및 상호학습 장려의 내용을 주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임소진, 2012). 그러나 부산지표 개발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려사항이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또한 제3차 마지막 PBIG 회의를 앞두고 제안된 예상지표는 총 13개였으며, 이는 마지막 PBIG 회의에서 총 10개로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지표들은 파리지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참고). 그리고 파리지표가 5대원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반면 부산지표는 4대 공동원칙은 고려하지 않고, 대신 제2차 PBIG 회의에서 논의된 7가지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한 나열적 지표의 성향이 강하다. 부산파트너십 10개 지표의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 7가지 기본개념은 1) 결과중심, 2) 포괄적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3) 투명성, 4) 예측성, 5) 책무성, 6) 양성평등, 7) 역량 개발 및 수원국 시스템이다.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2차 PBIG 회의 이후 제안된 예상지표들 중에서 제3차 PBIG 회의를 통해 PBA와 수원국내 원조분절화 항목이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BA 활용의 경우, PBA 방식 중 하나인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PBA 이행이 원조효과성을 보장하는 접근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PBA 이행이 쉽지 않은 공여국 및 PBA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수원국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 지표에서는 파리지표와 비교하여 PBA를 제안하고 있지 않지만, 수원국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중복과 행정비용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제시도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PBIG 참여국 중 일부는 6월 원조효과작업반 승인 이전의 기간 동안 PBA를 지표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표 2〉 PBIG 회의를 통해 논의중인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 제2차 PBIG 회의 이후 제안된 예상지표 (영국과 르완다 주도) | 제3차 PBIG 회의 이후 조정된 예상지표 (2012년 5월 현재) |
|--|--|
| 1. 수원국 주도의 결과 프레임워크 (results framework) 이용 | 1. 개도국의 우선사항을 충족하는 결과에 중심을 둔 협력 - 원조제공자들의 협력에 의한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의 이용 확대 |
| 2. 시민사회를 위한 가능한 환경 (enabling environment) | 2. 시민사회의 개발에 대한 기여 최대화를 위한 환경내에서의 시민사회의 사업운영 |
| 3.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환경 | 3.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환경 개선 |
| 4. 투명성 | 4. 대중이용이 가능한 개발협력 정보 |
| 5a. 예측성 (연간) 5b. 예측성 (중기) | 5a. 개발협력 예측성 (a) 연간 (b) 중기 |
| 6a. 의회 예산보고에 포함된 원조액 6b. 수원국 회계시스템에 통합된 원조액 | 6. 의회의 정밀검토(scrutiny)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보고 |
| 7. 상호책임성 |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협력 주체간 상호 책임성 강화 |
| 8. 양성평등 | 8.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공지출 보장 노력 |
| 9.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의 질 | 9. 수원국 시스템 및 제도의 강화 및 이용 (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의 질적 향상 (b) 수원국 공공재정관리 시스템과 조달시스템 이용 |
| 10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이용 10b.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 |
| 11. 프로그램형접근법 | |
| 12. 원조비구속성 | |
| 13. 원조분절화 (수원국내) | 10. 원조비구속성 |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2a & 2012b

그 외에 부산파트너십 지표 승인을 앞두고, 각 제안지표의 구체적 정의 및 모니터링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 및 연구과제

2012년 6월 부산파트너십 지표 승인 후의 Post-Busan 체제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은 앞으로 효과적 개발협력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여국들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을 위한 수원국의 시스템 강화를 비롯하여 수원국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및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될 것이며, 수원국의 역량 및 국가맥락에 맞는 차별화 된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분쟁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CAF)’를 중심으로 취약국 논의를 넘어서, 부산총회에서 중요하게 논의 된 New Deal을 중심으로 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방안 등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²⁾ 특히 취약국에서의 시스템 이용 방안 연구는 전체 수원국 시스템 이용방안과 차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원국 시스템 이용 중 조달시스템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원조 비구속성 강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또한 부산파트너십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원국내 분절화는 행정비용의 낭비와 수원국 부담,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수원국내 분절화 감소방안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파트너십 그룹을 통한 개발협력활동의 조화 및 노동분업(division of labor) 방안, 중복 프로젝트 확산 방지를 위한 원조 방향성 제시 등의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PBA가 부산파트너십 지표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각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 원조지원 방법 - 통합형 프로젝트(Integrated Projects), 국가프로그램가능원조(Country Programmable Aid, CPA) 및 사후송금방식원조(Cash on Delivery Aid, COD Aid) 등 - 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체별로 보았을 때, 신흥공여국의 Post-Busan 체제 및 MDGs 달성 노력에 대한 참여를 고려하여 삼각협력 및 남남협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KOICA와 같은 원조 이행기관에서는 수원국과 신흥공여국, 그리고 공여국 간의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한 남남협력 지원 및 삼각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부산파트너십 개발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남남

2) New Dea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을 참고 바람.

협력국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남남 및 삼각협력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부문의 개발에 대한 기여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후 PPP)의 효과적 이행방안 및 전략 등에 대한 심층있는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공헌의 개념을 중심으로 PPP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PPP를 통해서 개발협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본격적인 PPP 활성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및 수원국 발전과 MDGs 달성을 위한 참여방안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국제 시민사회 기관의 수원국 내 개발활동 모범사례 및 비교연구, 그리고 시민사회 기관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강화 연구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 중 하나이며, 제안된 지표에도 포함된 원조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과제는 국제사회 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즉, 원조투명성과 미래 원조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원조투명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는 KOICA의 개발협력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로써,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한 남남 및 삼각협력 사례 비교연구 및 한국원조의 삼각협력 강화방안, New Deal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무상원조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방안 연구, 비구속화를 위한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사례연구,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새로운 원조방법 활용 사례연구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6월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의 승인 이후, KOICA에서는 부산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참고로 Post-Busan 이행체제를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연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KOICA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 수립 동향 분석 및 한국 ODA의 대응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이후 부산파트너십 이행과 관련된 모든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 이해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2. 국외문헌

Accra High Level Forum (2008a). Accra Agenda for Action.

_____ (2008). Roundtable Topics for the Accra Third High Level Forum.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04). Joint Marrakech Memorandum.

Akiyama, T. and M. Kondo, Eds. (2003). Global ODA since the Monterrey Conference. Tokyo,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ASID)/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IDRI).

Amis, P. and L. Green (2002). Needs Assessment Report Survey on Partners' Priorities and Perspectives on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inal Report Prepared for OECD DAC Task Force on Donor Practices.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Amis, P., L. Green and M. Hubbard (2005). "Measuring Aid Costs: What Has Been Learnt and What Still Needs to be Lear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5: 373?378

Balogun, P. (2005). Evaluating Progress towards Harmonisation. Working Paper 15. London, DFID.

Banerjee, A. V. (2007). Making Aid Work. Cambridge, MA, MIT Press.

Bourguignon, F. and M. Sundberg (2007). Aid Effectiveness: Opening the Black Box.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World Bank.

Burnell, P. (1997). Foreign Aid in a Changing Worl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urnside, C. and D. Dollar (1997). Aid, Policies, and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777. Washington DC, World Bank.
- Calderisi, R. (2006). The Trouble with Africa: Why Foreign Aid isn't Worki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assen, R. (1994). Does Aid Work?: Report to an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xford, Clarendon Press.
- Chakravarty, S. R. and A. Majumder (2008).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easuring Progress towards Their Achieve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9(1): 109-129
- Chang, H-J. (2002).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Anthem Press.
- Chauvet, L. and P. Guillaumont (2004). Aid and Growth Revisited: Policy, Economic Vulnerability, and Political Instability. Toward Pro-Poor Policies: Aid, Institutions, and Globalisation. B. Tungodden, N. Stern and I. Kolstad, Eds. Washington DC, World Bank.
- Collier, P. (2006). "African Growth: Why a 'Big Push'?"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00(2): 188-211
- Collier, P. and D. Dollar (2002).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6(2002): 1475-1500
- Degnbol-Martinussen, J. and P. Engberg-Pedersen (2003). Ai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penhagen, Zed Books.
- De Renzio, P. (2006). "Briefing: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Role of Aid in Reach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frican Affairs* 106(422): 133-140
- Doucouliaagos, H. and M. Paldam (2006). "Aid Effectiveness on Accumulation: A Meta Study." *Kyklos* 59(2): 227-254
- Dovern, J. and P. Nunnenkamp (2007). "Aid and Growth Accelerations: An Altern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id." *Kyklos* 60(3): 359-383
- Driscoll, R. and A. Evans (2005). "Second-Generation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New Opportunities and Emerging Issues." *Development Policy Review* 23(1): 5-25
- Easterly, W. (2003). "Can Foreign Aid Buy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3): 23-48

- _____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Press.
- Easterly, W., R. Levine and D. Roodman (2003). *New Data, New Doubts: Revisiting "Aid, Policies, and Growth"*. Centre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26.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 Gerster, R. and A. Harding (2004). *Baseline Survey on Programme Aid Partners (PAP) Performance in 2003*. Report to the G-15 Programme Aid Partners and Government of Mozambique.
- Hanlon, J. (2004). "Do Donors Promote Corruption?: the Case of Mozambique." *Third World Quarterly* 25(4): 747-763
- Hansen, H. and F. Tarp (2001). "Aid and Growth Regressio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4(2): 547-570
- Hulme, D. (2007). *The Making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Development Meets Results-Based Management in an Imperfect World*. BWPI Working Paper 16. Manchester, Brooks World Poverty Institute.
- Killick, T. (2002). *Aid Conditionality.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V. Desai and R. B. Potter, Eds. London, Arnold.
- Lancaster, C. (2007). *Foreign Ai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nsink, R. and O. Morrissey (1999). *Uncertainty of Aid Inflows and the Aid-Growth Relationship*. CREDIT Research Paper No. 9/3. Nottingham, University of Nottingham.
- Martin, M. (2008). *Delivering beyond Paris: Objectives for Accra*. Presentation to the ODI Seminar, 4 April 2008.
- Maxwell, S. (2003). "Heaven or Hubris: Reflections on the New 'New Poverty Agenda'." *Development Policy Review* 21(1): 5-25
- McGillivray, M. (2004). *Is Aid Effective?* Helsinki, WIDER.
- Menocal, A. R. and S. Mulley (2006). *Learning from Experience? A Review of Recipient-Government Efforts to Manage Donor Re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Aid*. ODI Working Paper 268. London, ODI.
- Morrissey, O. (2004). "Conditionality and Aid Effectiveness Re-evaluated." Blackwell Publishing Ltd 00: 153-171

Moyo, D.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nother Way for Africa*. London, Penguin Books Ltd.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aris, OECD.

_____ (2003).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Good Practice Paper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Paris, OECD.

_____ (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5*. Paris, OECD.

_____ (2008). *Aid Effectiveness: A Progress Report o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_____ (2010). *Accelerating Progress in Aid Effectiveness: from Here to 2011*.

_____ (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_____ (2012a). *Proposed Indicators, Targets and Process for Global Monitoring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ost-Busan Interim Group. Paris, 21–22 May 2012. DCD/DAC/EFF(2012)8.

_____ (2012b). *Indicators and Targets for Global Monitoring Busan Commitments*. Revised Proposal. Post-Busan Interim Group, 22 May 2012.

Ranis, G. (2006). *Toward the Enhanced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conomic Growth Centre Discussion Paper No. 938. New Haven, Yale University.

Raffer, K. and H. W. Singer (1996). *The Foreign Aid Business: Economic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Riddell, R. C. (2007).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chs, J. (2005). *The End of Poverty: How We Can Make It Happen in Our Lifetime*. New York, Penguin Books.

Schiff, M. and L. A. Winters (2003).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Oxford University Press.

Sobhan, R. (2002). "Aid Effectiveness and Policy Ownership." *Development and Change* 33(3): 539–548

- Sogge, D. (2002). Give and Take: What's the Matter with Foreign Aid? New York, St. Martin's Press.
- Stern, E. (2008). Thematic Study on the Paris Declaration, Aid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Koege, DARA.
- Tarp, F., Ed. (2000). Foreign Aid and Development: Lessons Learn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London, Routledge.
- Therien, J. and C. Lloyd (2000). "Development Assistance on the Brink." The World Quarterly 21(1): 21-38
- Wolfensohn, J. D. and S. Fischer (2000).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
- World Bank (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 _____ (2003). Rome Declaration on Harmonisation. Washington DC, World Bank.